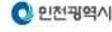
		<b>보도자료</b>		2025년 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 	
		배포일자 2021년 3월 2일(화) 총 3매	담당 부서 혁신과		담당자 • 규제개혁팀장 이성주 ☎440-1646 • 담당자 김지영 ☎440-1647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**인천시 적극행정, 거침없는 행보로 공직 대전환 시동**  
 - 우수공무원 사전 선발규모 설정,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-  
 - 든든한 보호와 지원으로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장기 미해결 문제와,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적극 행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.

- 적극행정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인식 확산시켜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
- 시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여 시민체감 성과달성 주력

○ 시는 정부지침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‘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’를 목표로 하는 ‘2021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’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먼저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전 선발규모\* 및 인센티브별 목표 인원을 설정하여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\*하여 유인효과를 강화하고, 엄정한 선발기준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.

\* 상·하반기 총 25명 내 특별승진(1), 특별승급(1), 성과급S(3), 장기교육훈련(2) 등  
 \*\* 인센티브 확대 8종(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) → 9종 (포상급 신설, 인천시 자체), 파격적 인센티브(특별승진 승급, 성과급S, 장기교육훈련)

○ 또한, 「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」\*을 제정하고,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30명까지 확대하여 위원회의 현안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.

\* 소송 이전 단계부터 면책기준 소명 등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

○ 아울러, 혁신과제 발굴 T/F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 과제를 발굴·선정하고,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.

○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“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,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이미지

